

남북한 경제정책 비교와 통일전망

조재호
경제학과

〈요 약〉

자연조건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남한은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경제여건하에서 남북한 경제는 지난 40년에 걸쳐 질적, 양적으로 서로 다른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남한 경제는 현재 고도성장을 유지하면서 전 산업분야에 걸쳐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구조적 조정기에 있지만, 북한 경제는 유엔의 SNA(신국민경제) 체계에 의해 국민소득을 추정하기 시작한 지난 1990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현상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세밀히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경제정책면에 중점을 두고 남북한의 경제실적을 비교하였고 통일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conomic Performance And The Prospects For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Jaeho Cho
Department of Economics

〈Abstract〉

Geographically, South Korea is relatively blessed with rich soil and mild climate, while North Korea is endowed with rich mineral resources and industrial bases. The initial economic structures have been changing since 1960s. South Korea has now more advanced industrial capacity than previously, while North

Korea has been subsequent negative its economic growths since 1990. The proposed policies of both countries and economic environment have resulted in such a substantial difference in economic performance between two countrie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ause of it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nd forecasts the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 서론

한국전쟁이후 남한과 북한은 서로 상반된 경제정책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내부지향 경제정책 혹은 폐쇄정책(inward looking industrial policy or delinking policy)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남한은 1962년부터 체계적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간섭하에 외부지향 경제정책 혹은 개방정책(outward-oriented industrial policy or openness policy)을 시행해 오고 있다.

남한 경제는 1963-92년 동안 연평균 9.0%의 높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하였다. 세계속의 한국경제는 과거 60년대의 개발도상국 경제에서 오늘날 선진국 경제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수출주도형의 개방적인 무역정책과 국민들이 잘살아 보겠다고 하는 경제마인드가 크게 작용했다.

반면 북한은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화학공업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폐쇄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기술진보의 둔화, 해외자금부족 그리고 생활필수품의 부족현상을 초래하였고 북한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몰아가게 하는 중요한 경제적 요인이 되었다.

세계경제는 1970년대 이후 급변하고 있다. 1970년대의 제1차 오일 쇼크와 세계경제 침체는 남북한 경제에게는 커다란 시련이었다. 개방경제를 수행하던 남한경제는 수출상품의 구조적 변화와 인력의 중등진출로 어느 정도 개발도상국가에게 떨어진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다. 반면 폐쇄경제의 북한경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완충시킬 수 있는 수출상품 부재로 국내 경제사정이 더욱 더 악화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주체사상을 확고히 하는 체제수호에 역점을 두었다.

1960년대에는 남한의 소득수준보다 북한의 소득수준이 높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1970년대부터 남한의 국민소득이 북한의 소득수준을 초과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 이후 남북한의 경제규모는 현저하게 벌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 경제규모의 격차 확대를 경제정책 측면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개방정책과 폐쇄정책의 이론적인 배경을 다루며, 제3장에서는 남북한의 경제규모를 비교한다. 제4장에서는 남북한의 경제통합전망을 소개한다.

II. 개방경제정책과 내부지향 경제정책 비교

19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개발이론에서는 개방경제정책과 폐쇄경제정책의 효율성 비교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었다. 1970년대부터 '네마리의 용'(한국,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홍콩)들이 고도성장을 이룩하기 시작하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개방정책이 내부지향 경제정책보

다 경제성장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1980년말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개방정책은 수출주도형의 경제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많은 경제학자들이 수출주도형 개방정책의 효과를 각국의 경제성장자료를 이용한 횡단면 회귀분석을 통하여 측정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들이 사용한 경제적 모형은 간단한 형태의 생산함수에 기초하였으며 개방정책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수출액의 변화나 국민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독립변수로 가정하여 경험적 분석을 하게 되었다. 생산함수에 수출변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저명한 경제학자인 발라사(Balassa)는 “생산함수에 자본과 노동 외에 새로운 수출변수를 포함시키는 것은 개방정책이 개발도상국가의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를 촉진시키고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전반적인 국가의 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가설에 의거한다. ... 이러한 가설에 입각해서 개발도상국의 자료로 경험적인 조사를 시도한 결과 개방변수를 포함한 경제모형이 개방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전통적인 경제모형보다 설명력이 높으며 또한 개방정책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에 개발된 경제발전이론에서는 개방정책과 함께 기술진보를 위한 R&D 지출과 고급인력개발이 국가경제에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이는 곧 경제를 성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내생적 성장이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내생적 성장이론은 개방정책과 R&D 지출 혹은 고급인력의 개발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투자기회의 확대를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경제성장을 주도한다는 주장이다. 내생적 성장이론은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의 경제현상과 후진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성과의 차이를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내부지향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많은 사회주의 경제학자들, 예를 들어 마르크스(Marx), 프레비시(Prebisch), 뮌르달(Myrdal), 그리고 종속이론주의자들은 내부지향적 경제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프레비시(Prebisch), 뮌르달(Myrdal)은 국제무역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국제무역이나 대외의존도의 증가는 국가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계획경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는 국가들은 해외의존도를 줄이는 경향이 있었으며, 개방경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경제계획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였다.

마르크스도 국제무역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국가는 결국 자본가의 이득을 보장하면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자본가의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점과 식민지개발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초과생산 능력을 식민지의 값싼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증대시키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무역을 통해 궁극적으로 선진자본주의 경제기술이 후진 자본주의국가로 이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남미에서 개발된 종속이론은 마르크스의 이론에 영향을 받았지만 마르크스 이론과 상반된 이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종속이론은 기술이 발전한 선진자본주의 경제(the center)와 후진자본주의 국가(the periphery)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경제규모나 기술수준에 차이가 상존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후진자본주의 국가의 교역조건을 계속 악화시켜, 선진자본주의 경제가 후진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잉여를 착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후진자본주의 국가는 영원히 후진국가로 남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저개발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폐쇄경제정책(Delinking policy)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폐쇄경제정책이란 극단적인 형태의 국내산업보호정책을 의미한다. 폐쇄정책하에서는 수입상

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보호무역으로 인한 교역조건의 개선효과보다 폐쇄경제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더 크게 되어 경제생산규모는 잠재생산규모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즉, 국제무역을 통한 국내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의 기회를 폐쇄정책으로 인해 상실하게 되고 국제무역의 동태적인 경제과급효과도 사라지게 되어,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경제의 신축성도 감소하게 되어 경제는 침체되는 것이다.

완전한 형태의 폐쇄정책을 실행하는 국가는 세계경제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폐쇄경제 정책을 실행한 국가로는 중국, 캄보디아, 탄자니아 그리고 북한을 들 수 있다. 그 중 북한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정치적 요인 혹은 경제적 요인으로 폐쇄경제체제로부터 점차 벗어나려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오직 북한만이 지난 40년간 폐쇄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폐쇄경제정책은 결국 북한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현재 북한의 경제규모는 남한과 비교가 안되는 수준으로 그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다.

종속이론은 후진국들이 비교우위가 있는 1차 상품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선진국과의 비교우위를 경쟁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일반적으로 1차 상품을 독과점 한다는 것은 세계경제에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세계경제에서는 항상 대체재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속이론가들의 주장을 세계경제의 흐름속에서 평가해 보면 이러한 정책은 여러 경험적 사실과 배치되고 있다. 종속이론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남미와 같은 후진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해외투자중에서 남미에 투자한 비중이 1950년 40%에서 1984년 12%로 감소하고 있다. 남미의 투자에 대한 수익률도 1979-84년 동안 평균 8%로 같은 기간의 다른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수익률 18%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III. 남북한 경제규모 비교

1. 개방정책과 남한경제

남한경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경제개발정책을 수행하기 시작한 1962년부터 1993년 현재까지의 기간을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격과 경제실적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대략 세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제1기는 1962-1972, 제2기는 1973-1982, 그리고 제3기는 1983-1993이다.

(1) 제1기: 개방정책확립기(1962-1972)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된 1962년 국내저축율은 3.2%로 그 당시 투자율 12.8%보다 훨씬 낮았다. 따라서 자원이 빈약한 상태에서 시작한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자도입이 필수적이었다. 또한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수출중대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1962년 12월부터 수출진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당시 경제구조가 취약하여 시장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시점에 정부가 직접 기업들에게 수출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을 증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경제구조가 취약했던 당시의 수출주도상품으로는 합판과 가발이 있었다. 또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중인 1965년 정부는 금융개혁을 단행하여 금리현실화를 통한 국내자원의 확충에도 노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으로 우리 경제는 제1기에서 경제개발의

초기 수입대체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고도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 제2기: 중화학공업육성기(1973-1982)

1960년대 고도 경제성장으로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진 정부는, 남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1973년에 중화학공업육성 정책을 시행하였다. 중화학공업이 당시 대통령의 안보적인 동기에서 시작되었건 아니면 다른 신흥개발도상국의 추격 때문에 시작되었건, 현재로서는 동기를 구분하는 것 자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대단했다는 것이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해외차관이나 금융기관의 정책금융을 통하여 조달, 지원하였다. 중화학공업 육성기간인 1974년에 정부는 국민투자기금을 발족시켜 저금리의 정책금융을 중화학공업분야에 집중적으로 배분하였다. 이 기금을 통한 기업에 대한 이자보조는 그 당시 GNP의 6%정도 까지 확대되었으며, 중화학공업진흥 정책이 끝난 1981년에도 은행예금 증가의 절반을 중화학기업들에게 지원할 정도였다.

1973년 11월 제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여 남한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다행히 1975년부터 남한의 대기업들이 중동시장에 진출하게 되었고, 중동의 오일달러 유입으로 남한 경제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여 1976년의 경제성장률은 13.1%를 기록하게 되었다. 정부의 수출성장정책은 지속되어 100억불 수출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무역상사를 설립케 하였다. 결국 1977년 12월 22일에 수출 100억불 목표를 달성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시작한 중화학공업육성 정책은 단기간에 투자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제개발 정책이었다. 따라서 외채의 의존도가 심화되고 또한 노동집약산업의 상대적 소외로 자원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정부주도하의 중화학공업육성은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을 동결하면서 대기업주도하의 경제개발이었으므로, 이로 인해 대기업의 비대화와 정경유착의 병폐를 잉태하게 되었다. 결국 1979년에 중화학공업육성 정책은 폐지 되었다. 1980년 제2차 석유파동과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남한은 마이너스 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3) 제3기: 3저시대(1983-1993)

1983년부터 대외경제여건은 좋아지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3저현상은 중화학공업육성 정책으로 인한 경제의 왜곡현상을 단기간에 치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화학공업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3저현상은 국제원유가격의 하락, 국제금리의 하락, 그리고 원화의 평가절하를 의미한다. 국제원유가격은 1981년 1배럴당 34.5달러에서 1983년 29.3달러, 1988년 14.5달러로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중 총수입액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24.4%에서 21.3% 그리고 1988년에는 7.1%로 낮아지게 되었다. 국제금리는 1981년 16.5%에서 1983년 9.6%, 1988년 7.7%로 하락하였다. 외채가 많은 남한경제에서 국제금리의 하락은 외채에 대한 이자부담을 크게 완화시키는 효과와 기업의 재정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엔화의 강세(원화의 약세)는 남한의 수출주도품목인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대미수출을 증대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3低現象으로 1986년에는 경상수지가 역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1986·87·89년의 경제성장률은 12.9%, 12.9% 그리고 12.4%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공적인 경제성장은 당시의 3저현상이 남한경

제가 고수해온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에 잘 부합되어 경제의 질적, 양적 팽창을 가져오게 된 것에 기인한다.

당시 1986년에 수립한 제6차 경제개발에 의하면 계획이 끝나는 1991년도의 순외채 규모를 135억 달러로 계획하였는데, 1987년에 수정발표한 제6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서는 1991년 남한은 순외채를 영으로 하는 즉, 채권국가가 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조급한 정책에 대해, 남한정부가 너무 빨리 외채를 갚는데 주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일었다(Cho, 1992 참조). 당시 외채를 갚는 정책은 우량의 해외자본을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으며, 국제수지의 흑자로 대외개방압력이 가중되어 1992년에는 경제성장률이 4.7%를 기록하게 되었다. 제3기의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기능에 입각한 개방정책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남한경제는 국내외적으로 격변하는 세계경제질서에 적응하기 위한 구조적 조정을 맞이하고 있다.

남한경제의 특징을 요약하면, 지난 30년간 남한경제는 대내외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정부의 수출주도정책은 고도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국민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2년 5.1%에서 1992년 39%로 증대되었으며 세계수출규모에서 남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2.2%로 IMF에 등록된 국가중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동안의 경제구조도 많이 변화하였지만 수출주력상품도 변화하여 현재의 남한의 수출주도품목은 반도체 제품으로 과거의 노동집약적 상품에서 자본집약적 상품으로 수출구조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2. 내부지향적 경제정책과 북한경제

북한경제는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 내부지향적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북한경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북한경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남한경제의 분석에서 행해졌던 시기별 특징을 추출하는 전장의 분석방법은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이 장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이 경험한 경제발전단계를 설명하면서 북한경제의 실상을 유추하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개발도상국들은 공통적으로 제1단계, 제2단계의 수입대체단계를 경험해오고 있다.

(1) 제1단계의 수입대체단계

제1단계의 수입대체단계에 대한 대상 상품으로는 소비재상품, 섬유제품 등의 경공업제품이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이들 상품을 국내생산으로 수입을 대체하는 노력을 하였다. 이들 상품들의 국내생산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구조에 알맞고 모두가 노동집약상품이다. 이들 상품은 비교적 쉽게 국내의 생산설비를 확장하면서 생산할 수가 있었다. 또한, 국내생산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외부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경제외부효과로는 제1단계 수입대체기간중에 노동자들의 교육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커졌으며, 기업의 경영능력, 그리고 간단한 형태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제1단계의 수입대체단계를 거쳤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폐쇄경제정책을 고수하면서 경제적인 힘이 모두 중화학공업육성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비재상품의 개발이 소외된 북한경제는 제1단계의 수입대체단계를 뛰어넘어 다음의 제2단계 수입대체단계로 경제구조를 발전시켰다.

(2) 제2단계의 수입대체의 선택

제1단계를 거친 개발도상국들은 계속 제2단계의 수입대체단계를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의 개방정책을 지향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 남한은 제1단계를 거쳐 수출주도형의 개방정책을 선택하였으며, 북한은 제1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2단계로 진입하였다.

제2단계의 수입대체단계 대상 상품으로는 중간재상품, 내구성상품, 그리고 화학, 철강제품이 있다. 이들 상품의 성격은 제1단계의 수입대체상품과 성격이 다르다. 이들 상품들은 자본집약적 상품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정도의 생산설비를 필요로 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이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국민이 국내소비를 위한 생산수준보다 더 큰 규모의 생산설비가 구비되어야 하며, 소량생산의 단계에서는 비용이 급증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생산 조직력이나 기술수준의 미비한 상태에서는 평균생산 비용이 더욱더 상승하기도 한다.

중화학공업에 치중한 북한경제는 제1단계의 수입대체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2단계의 수입대체단계로 넘어갔으며, 이러한 경제정책의 배경은 앞서도 거론한 프레비시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는 일차상품이나 제조업의 가격경쟁력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은 교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내시장 육성에 경제력을 집중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이 북한의 경제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북한경제가 자급자족형태의 산업구조를 추구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면서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의 경제개발을 모방하였는데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북한경제에는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었다. 결과적으로 북한 경제는 러시아 경제에 지속적으로 의존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남한의 교역은 전세계국가들(미국과 일본과의 교역비중은 각각 30%와 25%이다.)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북한의 교역은 70%가 사회주의 국가에 편중되었으며 55%가 러시아에 집중된 실정은 북한경제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적, 물적 자원이 빈약한 북한경제로서는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육성을 하려는 정책은 개발초기부터 무리였다.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해외자본 조달이 어려운 상태에서 해외의 선진 기술과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었다.

국내생산비용을 수출액으로 나눈 국내자원비용(Domestic resource cost: DRC)을 계산해보면 제2단계 수입단계의 중화학제품들의 국내자원비용은 제1단계 상품보다 상당히 높다. 중화학공업에 중점을 두고 발전한 북한경제처럼 폐쇄경제를 고수하고 국내시장이 협소한 경제에서는 국내자원비용은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1989년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에 따른 러시아의 원조삭감과 에너지공급 중단 등은 북한경제의 국내자원비용을 상승시켜 북한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다른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북한의 대부분의 생산설비가 낡고 경영효율이 떨어져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표-1〉은 남북한 경제의 규모를 비교한 것이다. 북한경제의 자료는 1993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로 북한의 국민총생산액은 유엔의 SNA(신국민경제)체계에 의해 추정된 것으로 다른 자료보다 신빙성이 높다. 〈표-1〉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남한과의 경제력격차 역시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GNP는 1992년에 마이너스 7.6%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90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국민소득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1인당 GNP 943달러는 남한(6749달러)의 7분의 1 수준으로

1991년의 6분의 1정도에 비해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대외거래에서 남한의 수출규모는 766억 달러로 북한 10.2억 달러와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듯이 외채는 증가추세에 있다. 외채를 경상GNP로 나눈 비중은 북한이 46%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며 이에 반해 남한은 14.5%를 기록하였다.

〈표-1〉 1992년 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단위	북한(A)	남한(B)	배율(B/A)
1. 인구	천명	22,336	43,663	2.0
2. 경상GNP	억달러	211 (229)	2,945 (2,817)	14.0 (12.3)
3. 1인당GNP	달러	943 (1,038)	6749 (6,518)	7.2 (6.3)
4. 경제성장률	%	-7.6	4.7	-
5. 대외경제				
부역총액	억달러	26.6	1548.1	59.6
(수출)		10.2	766.3	75.1
(수입)		16.4	817.8	49.9
외채	억달러	97.2	428.2	4.4
(외채/GNP)	%	46.0	14.5	-

주:()는 91년 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1993.

IV. 남북한의 통일전망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은 이데올로기의 논쟁을 종식시켰으며 세계는 경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외교정책의 방향이 자국에 대한 경제적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남한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일본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하여 일본의 재무장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일본의 재무장은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경제적 이익 또한 동북아시아에 얽혀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반도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야만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채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와 각국의 경제이해 관계로 다시없는 좋은 통일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잘 이용해야만이 한반도의 통일은 보장이 된다. 통일 이후 한반도의 총인구는 7천만명 수준으로 세계의 열강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중요한 문제는 언제,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 지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가상의 통일 시나리오에는 다음 3가지가 있다. 첫째, 북한의 부력통일 가능성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북한의 무

력통일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 이유로서 북한의 무기체제는 러시아 무기체제를 이용하였으므로 현재같이 러시아가 국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러시아의 무기지원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쟁의 발생 확률은 낮다. 둘째, 독일식 통일방안이 있다. 남북한 상황은 지난 30년간 서로 인적 교류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식 통일 방안은 설득력이 희박해 진다. 마지막으로, 단계적인 통일방안이다. 현재 남한 정부의 입장은 단계적인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을 통일기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즉 남북한의 통일이 짧은 시간안에 이루어 진다고 가정해도 당분간 남한과 북한의 현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점진적인 교류를 통해 통일을 완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계적 통일방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통일이후 남북한이 제시한 시나리오에 맞게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항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경제분석이 통일전에 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남한경제가 북한의 2천2백만의 주민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통일이후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현재 남한의 경제학자들은 단기의 통일은 엄청난 비용을 수반시켜 궁극적으로 통일 한국의 경제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점진적인 통일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통일은 적지않은 경제이익을 수반시킬 수도 있다. 우선 중국과 국경무역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한반도 국경에는 중국의 5개성이 산재하고 있으며 인구도 2억이 넘고 있다. 또한 풍부한 시베리아의 자원과 시베리아철도를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 이익은 증대된다.

현재 이영선(1993)과 KDI(1992)에서는 통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각각 향후 10년간 매년 192억 달러, 200억 달러의 통일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 분석에는 남북한 통일이후의 교역의 증대로 인한 경제이익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통일이 급진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가정하에서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소에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500억 달러의 통일비용이 소요된다고 계산하였다.

통일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정확한 계산은 본 논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들의 계산이 합리적이라는 가정하에서 남한의 생산력수준이 이들의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앞에서 개방정책효과를 분석할 때 개방변수를 포함한 생산함수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론적인 근거에서 남한의 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남한 전체의 자본량(K) (PYO, 1992, KDI), 노동인구(L), 그리고 수출규모(X=총 수출액/전기기간 평균수출액)를 생산요소로 하는 생산함수를 추정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표본기간: 1960-1992년)

$$\text{Log GNP} = 0.419 \log K + 0.619 \log L + 0.065 \log X$$

(9.34) (12.80) (4.79) ()-t값, $R^2 = 0.99$

이 추정결과는 추정계수들이 이론에 (Cho, 1992 참조) 부합되는 부호를 가질 뿐만 아니라 t 값도 높아 통계적 유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정계수 R^2 가 0.99로서 추정식 전체의 설명력도 매우 높다.

이 추정함수를 이용하여 경제통합의 이익을 추정할 수 있다. 통일이후 북한의 노동력, 자본량 및 수출확대로 인한 생산량 증대가 경제통합 이익이라 정의하고, 계산된 통합비용과 통합이익을 비교하면서 남한의 생산력 수준이 통일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력, 자본량, 수출증대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등이 통합이익을 계산하는데 필요하지만 현재로는 이들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남북한 통합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들 자료들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서서히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남한이 주도적 위치에서 외교적인 접근으로 이루어 질 전망이다. 이 때 통일비용의 크기를 염두에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방안과 남한의 생산능력이 통일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통일문제를 접근하는 방안 사이에는 효과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후자에 비해 통일전망에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한반도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경제전망으로는 남한경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북한경제는 앞에서 거론한 여러 이유 때문에 국제경쟁력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 북한경제의 침체는 남북한 통일비용의 상승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통일비용의 계산은 매우 필요하지만, 만일 남한의 경제력과 통일의 이득이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면 현재의 점진적 통일 방안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즉, 급진적 통일방안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이영선, 북한의 현실과 통일과제, 연세대학교 동서문화연구원, 1993.

Bae, JinYoung, "Speed and Timing of Economic Integration : Unification Cost Approach," Two Years Since German Unification, edited by Bae, JinYoung,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993.

Balassa, Bela, Lecture in Economic Development given a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in Fall semester, 1990.

Cho, Jaeho, External Debt and Openness Policy in Korea, PH.D. Dissertati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1992.

Hwang EuiGak, "Difference in Industrial Structure of Two Koreas and Prospects for Economic Integration," edited by Bae, JinYoung, 1993.

Pyo, Hak K, "A synthetic Estimate of the National Wealth of Korea," 1953-1990, KDI Working Paper, No 9212, 1992.